정부 차원 보험사기 전담 조직 만들어야

광주일보 공익 캠페인
보험사기 악순환 고리 끊자

〈하〉보험업계 고사위기…근절대책은

보험회사가 수사 의뢰 '수동적 구조'에 적발 쉽지 않아
'땜질식' 대처 벗어나 선제적 예방·단속 대책 마련 시급
국회 법 개정 미온적…계류 중인 개정안만 무려 17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보험사기로 보험금 누수가 잇따르고, 보험업계가 고사 위기에 놓이자 효과적인 보험사기 근절 대책에 대한 논의도 불붙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5월 1일부터 2개월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광주경찰도 반부패경제수사과 4명을 모아 보험사기 전담팀을 만들고 집중 수사를 펼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보험사기 적발 과정은 보험회사가 먼저 혐의점을 인지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 등 수동적인 구조로 돼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땜질식' 대처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기를 근절하려면 수동적인 적발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보험범죄 전담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보험업계와 감독 당국, 사법 당국이 정보를 교류하고 공조 수사를 할 수 있는 연결고리로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보험사기 공동대응 기구를 세우고 수사당국과 정보를 공유하며 직접 수사까지 나서는 경우도 있다.

미국은 각 주별로 보험청을 별도 설치하고 보험 관련 범죄를 조사·수사하는 보험조사국(IFB)을 뒀다. IFB는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으며, 체포·구속영장 집행·소환장 발부 등 권한도 갖고 있어 주도적으로 보험사기에 대응하고 있다. 영국 또한 지난 1995년 영국보험자협회(ABI)와 정부 연합으로 보험사기방지관리소와 보험범죄 및 사기방지국(CFPB) 등을 설립하고 경찰과 공동 수사를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보험조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수사 권한은 없으며 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보험사기 예방·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 2009년에는 서울중앙지검에 검·경·금융감독원 등이 합동으로 보험범죄 정부 합동대책반을 설치했으나 지난 2017년 이후 활동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효과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업계에서는 정부·국회가 관련 법·제도 개선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1월에는 보험범죄 방지 정부합동대책반 설치를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후속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처럼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무려 17개에 달한다.

보험업계는 무엇보다 시민들 스스로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신고 및 대처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성훈 손해보험협회 서부지역본부장은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선 정부와 국회가 전향적으로 나서서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시민들도 스스로 보험사기에 가담하지 않는 것과 발견 즉시 신고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끝〉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장성 전자제품 부품공장서 로봇에 맞아 작업자 숨져

장성의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작업자가 산업용 로봇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장성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새벽 6시께 장성군 동화면에 있는 전자제품 부품제조 공장에서 일하던 작업자 50대 A(여)씨가 산업용 로봇에 맞아 숨졌다.

A씨는 당시 산업용 로봇을 청소하던 중 인근에 있던 필리핀 출신 외국인 노동자 B씨가 로봇을 작동시켜 로봇 팔에 머리와 복부를 맞아 쓰러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치료를 받다 결국 29일 숨졌다. 경찰은 로봇을 작동시킨 B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해 조사중이다.

B씨가 로봇을 작동시키기 전 주변에 작업자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주의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빨간 마후라' 받았습니다 44명의 신임 조종사(공군사관학교 69기)들이 31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 선봉문화관에서 열린 고등비행교육과정 수료식에 참석해 조종사의 상징인 '빨간 마후라'를 수여받고 경례를 하고 있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제공〉

"윤 정부, 시민단체 표적 굴종외교 국면 전환 말라"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윤석열 정부는 애먼 시민단체 표적 삼아 굴종외교 국면전환 말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연일 보수언론의 규탄을 받아온 시민모임은 3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도와 대법원 배상 판결을 이끈 시민단체를 표적 삼는 윤 정부의 모습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14년간 묵묵히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에 앞장서 온 시민단체를 향해 독설을 퍼붓는 상황이 연일 발생하고있다"며 "결기와 분노는 시민모임을 향할 것이 아니라 사죄는 커녕 반성조차 없는 전범국 일본을 향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인 국민의 힘이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하려는 데 대해선 "무너지는 경제와 국정은 내팽개치고 광주에 주소를 둔, 직원도 둘밖에 없는 시민단체를 향해 이렇게 분기탱천해야 할 일이냐"며 되물었다.

그러면서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가 피해자 인권 수호와 존엄 회복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되묻고 싶다"며 "일본 정부나 미쓰비시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모욕과 수모, 배신감을 우리 정부에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

조선대 '카풀 승강장' 17년만에 사라진다

코로나 등 영향 이용 적어 7월 폐쇄

조선대 교내에서만 운행하는 카풀(Carpool)이 17년만에 추억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조선대는 교내 카풀 전용으로 만든 '차량 함께 타기 승강장'(승강장·사진)을 7월부터 폐쇄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사회과학·사범대학, 미술대학, IT융합대학 건물 인근에 남아있는 승강장 3곳을 철거하고 그곳에 '교내 서행 제한속도 20㎞', '킥보드 천천히' 등 안전 표지판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조선대 교내 카풀은 지난 2006년 학생처와 총학생회가 함께 도입했다. 넓고 오르막이 많은 캠퍼스를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비슷한 목적지로 가는 학생이나 교직원을 태우자는 취지였다.

처음 카풀이 도입되자 교직원이나 학생들은 오고가는 정(情)으로 모르는 사람도 차량에 태울 정도로 인기를 끌면서 조선대만의 명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량동승 범죄 발생으로 인해 사회문제가 되자 승강장이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했고 코로나19로 대부분이 사라졌다. 애초 9곳이 만들어졌지만 그동안 6곳(정문, 본관 2곳, 중앙도서관, 체육대학 2곳)이 사라지고 3곳만 남았다.

조선대 학생들 대다수는 승강장의 용도와 이용방법을 모르고 있었다.

신문방송학과 나경민(여·23)씨는 "승강장을 보긴 했지만, 이용해 본적은 없다"면서 "주변에 이용했다는 사람도 없어서 정체가 궁금했다"고 되물었다.

체육학과생 박단비(여·24)씨는 "승강장 바로 위쪽에 사범대학 스쿨버스 정류장이 있어 카풀보단 스쿨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승강장이 있어도 이를 이용하는 학생이 없으니 철거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

5·18기념재단, 5·18해결 5원칙 시민공론화 제안

5·18기념재단이 6월부터 5·18해결 5원칙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재단은 31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공론장을 마련하게 된 것은 지난 2월 19일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공로자회와 특전사동지회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동선언식'을 강행한 이후 공법2단체와 시민단체 간 갈등이 격화한 것이 계기가 됐다.

재단은 공론장을 통해 갈등의 근원이자 출발점인 5·18해결 5원칙을 재검토하고 시민 의견을 모아 중재 역할에 나서며, 나아가 5·18이 나아갈 길까지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재단은 100인토론, 집담회, 토론회, 학술행사, 설문·여론조사 등 다양한 형식으로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시민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집담회를 최소한 네 차례 이상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30일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나들의 5·18위원회'와는 취지가 맞닿아 있으나, 재단과 광주시는 이와 관련 사전 논의를 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재단은 '공동선언식'과 관련해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 시민과 함께하는 용서가 필요하며 오월단체·시민단체 간 상호 인정·존중도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광주시민을 학살한 특전사에 대한 지역 정서는 말할 것도 없으며, 특전사들이 피해자를 자처하는 것은 경악스럽다"는 의견도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